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김 상 군 *

정 원 오**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의 검토
III. 연구방법 및 조사 개요
IV. 조사결과
V. 결론

I. 서론

한 사회의 복지제도 혹은 사회정책은 그 사회의 가치 혹은 사상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의식의 현황이 분석되고 그 특성이 파악된다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도 있다.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있지만 현실 제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사회정책의 결정이 근본적으로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이 재강조 되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관심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분야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는가, 둘째, 그러한 경향성에 영

* 김상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79년에 사회사업가를 대상으로한 연구¹⁾, 1980년에 국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연구²⁾, 1981년의 영세민에 대한 연구³⁾, 198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⁴⁾, 그리고 같은 연도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⁵⁾와 공단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연구⁶⁾들이 있으며, 1990년에는 보사부 관료를 대상으로 복지이념을 조사연구⁷⁾한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연구들 중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한 연구는 1980년에 김영모교수가 수행한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한 조사시기가 10여년 전의 조사여서 그동안 복지의식이 상당히 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몇 가지 보완할 측면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첫째, 1980년 복지의식조사연구는 통계적 검증절차를 밝히지 않은채 집단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분석방법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본 연구에서는 피할 수 있으며, 둘째, 기존의 조사연구와 본 조사연구를 비교해 봄으로써, 특수 집단들(대학생, 청소년, 관료 등)을 대상으로한 연구들에서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된 요인들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측면이

1) 최일섭, "Microscopic vs. Macroscopic Orientations of Korean Social Workers Regarding the Problem of Poverty : A Descriptive Study," Case Western Reserve Univ. 박사학위논문, 1977.

2) 김영모,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1980.

3) 한국개발연구원,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1981.

4) 김상균, "한국대학생의 복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7권, 제 4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5.

5) 김영모, "한국청소년의 사회관," 「사회정책연구」, 제6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5.

6)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공단근로청소년운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연맹, 1985.

7) 김성한, "보건사회부 관료의 복지이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다.

최초에 제기되었던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은 기존연구들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첫째, 19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복지의식에 관련된 요인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가? 넷째, 특수집단의 복지의식결정요인과 국민전체의 복지의식결정요인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상과 같은 네가지 질문 중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은 본 조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해답이 가능할 것이고 세번째, 네번째 질문은 본 조사결과와 기존의 조사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의 검토

1. 이론적 배경

인간의 마음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의식이라고 할 때 의식은 마음의 인식작용이라는 과정적 측면과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생기고 축적되는 마음의 인식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⁸⁾. 또한 의식은 인간의 행위와 연결되는 행동성향이라는 뜻의 태도라는 개념도 함축한다. 마음이 의식하는 것은 항상 어떤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물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의 복지와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제도, 복지체계 등을 대상으로하는 인간의 태도 혹은 의식을 우리는 복지의식이라고 개념규정할 수 있다.

복지의식의 내용들은 이념적 갈등의 근원을 따라 6가지측면에서 상반된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⁹⁾. 첫째로 사회가치의 근본적 상이성에 따라 자

8)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 변화의 경험적 추적」, 박영사, 1992, p.487

9) 김상균,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8, pp.111-113.

유, 개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지향하는 쪽과 평등, 자유 그리고 우애를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둘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입장의 차이로서,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시키고 개인의 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책임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세번째 측면은 빈곤에 대한 상이한 개념규정으로부터 비롯된다. 빈곤을 절대적 빈곤으로 개념규정하는 입장과 상대적 빈곤으로 규정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인간이 육체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가지지 못하여 문제가 될 때 사회복지적 개입을 주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광범위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네번째 이념적 갈등의 근원은 국가자원의 배분 및 분배문제에서 발견된다. 경제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열등수급(less eligibility)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정부예산의 사회복지 지출을 억제하여 더 많은 국가자원이 시장경제의 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회개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경제불황 및 공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추구한다.

다섯번째 측면은 열등낙인(stigma)의 문제로서 국가자원의 낭비 예방, 근로의욕 고취 및 부정심리 추방 등 낙인이 주는 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낙인이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킴으로써 국민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낙인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측면은 국가자원의 낭비에 관한 논쟁에서 발견된다. 사회복지제도가 낭비적이고 부정심리를 조장하는 제도라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서 부유층의 탈세가 국가자원의 낭비에 더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섯가지 측면에서 전자에 가까운 입장과 후자에 가까운 입장들이 의식의 스펙트럼상에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이 복지의식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복지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특정형태의 복지의식을 갖게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복지의식의 밑바탕에는 개인의 가치나 이념이 깔려있다고 본다. 이는 복지모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데올로기를 구분 기준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파커(Julia Parker)는 복지모형을 자유방임, 자유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하고 있으며¹⁰⁾, 죠지(Vic George)와 윌딩(Paul Wilding)은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하고 있고¹¹⁾, 룸(Graham Room)은 시장자유주의, 정치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신마르크스주의로 분류한다¹²⁾. 이러한 연구들에서 우리는 복지의식을 규정하는 요인 중에는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계급 혹은 계층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념 혹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 관련된 요인들 중 사회계층(계급)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의식에 관련된 변수들로서 정치적 성향, 사회계층에 관련된 요소, 기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변수들 중 복지의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검토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복지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는 조사가설을 검증하는 수준이라기 보다는 주로 이념형의 규명, 즉 의식의 경향성에 초점

10) Julia Parker, *Social Policy and Citizenship*, Macmillan, London, 1975, pp.4-5.

11) V.N.George and Paul Wilding, *Ideology and Social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6, pp.103-104.

12) Graham Room, *The Sociology of Welfare*,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Oxford, 1979, Ch.3.

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 이는 의식의 경향성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념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기란 용이하지 않은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원인은¹³⁾ 첫째, 의식이 나 이념 그 자체가 가지는 속성에서 기인한다. 의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규정성을 갖는 실체가 아니라 주관적 태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안정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조사방법 내지 측정도구 상의 문제로써 의식을 객관화된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연구들은 복지의식 규명에 주목적을 갖고 부차적으로 경험적 추론에 입각해서 설정한 독립변수들과 복지의식(종속변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한계들을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변수들과 연구자가 추론할 수 있는 변수들을 첨가하여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를 설정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표1> 기존의 복지의식 조사연구

연구자	조사대상 및 표본수	조사영역	이념 및 의식모형
최일섭 (1979)	사회사업가 (N=309)	빈곤문제	미시적 거시적
김영모 (1980)	전국의 가구주 (N=2,000)	복지권, 빈곤, 실업, 질병, 교육, 주택, 노인	자유방임형 보완적자유주의형 제도적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

13) 김성한, 상계서, 1990. p.23.

한국개발 연구원 (1981)	서울시빈곤가 구 (N=400)	빈곤의식, 빈부격차, 기타 사회의식	의식모형 미설정
김상균 (1985)	서울시내 5개 4년제 대학 1학년, 4학년 (N=852)	빈곤,의료,주택 및 토지, 실업,교육,사회가치, 청 소년 노인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예산,사회개혁, 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김영모 (1985)	국민학생(5-6) 중학생(1-3년) 고등학생 (1-3년) (N=8,281)	1. 사회문제관 - 청소년비행, 불평등 - 지역사회해체 - 가족해체 2. 사회복지관 -빈곤 -보건 -실업 -교육	보수적 (개인적) 진보적 (사회적)
한국복지 정책연구 소(1985)	공단근로청소년 (N=2,772)	복지책임 -빈곤 -의료 -실업 -교육	개인적 사회적
김성한 (1990)	보건사회부관료 (전수조사,N=13 8)	사회가치,경제성장과 분 배 의료,주택,교육, 소득 보장 실업문제, 복지책임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 이 표는 김성한(1990)의 논문 <표2-3>을 참조하여 첨삭한 것임.

최일섭의 연구는 한국사회사업가의 이념관을 밝히기 위해 복지의식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나눈 다음 사회문제의 원인, 현상분석, 해결방안 등에 관련된 질문으로 5점 척도를 만들어 이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사회사업가들은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성(sex),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부모의 직업, 수입, 교육정도)등의 변수로서 상당한 정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¹⁴⁾.

김영모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지의식의 대상영역은 복지권, 빈곤, 실업, 교육, 주택, 노인의 7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7개의 복지지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개인, 가족, 친척(조상), 개인+정부, 직장, 지역사회, 정부(국가)라는 7점 척도를 구성하여 이의 결과를 응답총화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은 보완적 자유주의 모형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지역, 직업, 계층, 성, 연령, 학력으로 설정하였고, 그 중 계층, 성, 연령, 학력의 차이에 따라 복지의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¹⁵⁾.

김상균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복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이념을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의 4분법으로 나누고 각각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개별적인 예를 4점 척도로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학생은 중도우에 가까운 중도좌의 복지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ANOVA와 T-test를 사용하여 학년, 전공, 성, 부의 생활수준, 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복지의식이 상이함을 제시하였다¹⁶⁾.

김성한의 연구는 보사부 공무원으로서 중앙부서의 사회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의식을 조사하였고, 복지이념을 구성하는 척도로서 가치에 관한 항목 2개, 경제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항목 1개, 의료, 주택, 교육에 대한 항목 각 2개, 소득보장에 관한 항목 3개, 실업문제와 복지 책임에 관한 항목 각 1개, 총 14개의 문항을 극우에서 극좌로 대표되는 4점척도로 구성하여 전체점수의 평균점을 복지의식지표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 성, 연령, 학력, 종교, 직급, 보사부 근무년수, 공무원 재직기간, 부친의 교육정도, 성장시 가정의 소득수준, 직무의지, 직무만족도로 설정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의 보사부 공무원의 복지이념은 중도우에 가까운 중도좌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종교와 부의

14) 최일섭, 상계서, 1977.

15) 김영모, 상계서, 1980.

16) 김상균, 상계서, 1985.

교육수준임을 변량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¹⁷⁾.

이상의 검토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기존 연구들에서 복지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일치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역시 일관되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의식이나 이념 그 자체가 가지는 속성 때문인 것으로서 연구의 한계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을 인정하고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설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의 개요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93년 11월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다. 다단계 층화 표집법에 의해 서울을 위시한 네 주요도시들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1,198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응답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성별분포 : 총 1198명 중 남자는 52.3%인 627명, 여자는 47.7%인 571명이었다.

② 연령별 분포 : 조사대상자 중 20대가 30%, 30대가 30.6%, 40대가 19.4%, 50대가 14.5%, 60대 이상이 5.4%이었다.

③ 조사지역별 분포 : 서울이 25%, 경기도(인천포함)가 16.4%, 강원도가 4.1%, 충북이 3.3%, 충남(대전)이 7.3%, 전북이 5.2%, 전남(광주)이 8.8%, 경북(대구)이 12.2%, 그리고 경남(부산)이 17.5%이었다.

④ 학력별 분포 :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은 국졸이하가 11%, 중졸이 14%,

17) 김성한, 상계서, 1990.

고졸이 38%, 초급대학을 포함한 대졸 또는 그 이상이 36%로 나타났다.

⑤ 가구소득별 분포 : 응답자 중 월 가구소득 평균이 49만원이하인 경우가 7.6%, 50-99만원인 경우가 23.3%, 100-149만원이 30.9%, 150-199만원이 19.3%, 그리고 200만원이상인 가구가 19%로 나타났다.

⑥ 직업별 분포 : 전문 관리직이 14%, 사무직이 12%, 판매 서비스직이 18%, 생산직/농어민이 22%, 무직을 포함한 학생이 12%, 그리고 주부가 20%로 나타났다.

2. 변수의 설정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독립변수

① 정치적 성향

* 정치적 이념의 좌<-->우 지향성 : 변수값은 극좌 1, 좌 2, 중도 3, 우 4, 극우 5의 5점 척도¹⁸⁾

*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 적극 지지 5, 약간 지지 4, 중간 3, 약간 반대 2, 적극 반대 1의 5점 척도¹⁹⁾

② 사회적 계층

18) 정치적 이념을 측정하기 위해 질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흔히 우리들은 개인들의 정치적 태도를 '좌'와 '우'로 분류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정치적으로 '좌'에 속하는 사람을 1점, '우'에 속하는 사람을 10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성향이 다음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응답은 10점 척도로 표기하도록 되었으나, 정치적 성향을 극좌와 극우를 양극으로 하는 5점 척도로 나타내는 일반적인 분류경향을 따르기 위해 10점척도를 2구간으로 묶어 5점척도로 재구성하였다.

19) 정치적 이념과 마찬가지로 10점척도로 측정되었으나, 분석의 편의상 5점척도로 변형시켰음. 설문지의 질문은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를 어느 정도 지지, 혹은 반대하는가"로 구성되었음.

* 주관적 계층 판단 : 상류계층 1, 중상계층 2, 중하계층 3, 하류계층 4의 4점척도²⁰⁾

* 소득수준 : 50만원 미만 1, 50-99만원 2, 100-149만원 3, 150-199만원 4, 200만원 이상 5의 5점척도

* 직업 : 1 전문관리직, 2 사무직, 3 판매서비스직, 4 생산직, 5 농어민, 6 학생, 7 주부, 8 무직

③ 기타 사회인구학적 변수

* 성 : 남성, 여성

* 연령 :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

* 출신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이하

* 학력 :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이상

2)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복지와 관련된 9가지 영역에 대해 10문항이 준비되었다. 그것은 의료, 교육, 장애, 실업, 조세, 주택, 그리고 자선사업, 평등, 복지와 근면성의 관계 등으로 구성되며 조세는 두문항으로 이루어졌다²¹⁾. 각 문항은 특정영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 내용에 대한 찬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의견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

20) "선생님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음.

21) 복지의식을 9개 영역의 10문항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복지영역을 무한히 포함시키기는 힘들며,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복지의식지표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본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대표적인 영역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며, 한편으로는 추후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복지의식의 대체적인 경향성 정도에만 유의미할 것이며, 측정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한정된 의미로 해석되기를 기대한다.

- ②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
- ③ 우리동네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
- ④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⑤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 ⑥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⑦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국유화시켜야 한다.
- ⑧ 사회복지에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
- ⑨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좁혀질수록 좋다.
- ⑩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국가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들은 더 게을러진다.

각 문항의 변수값은 전적 찬성=2, 약간 찬성=1, 약간 반대=-1, 전적 반대=-2점을 부과해서 4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③, ④, ⑧, ⑩ 문항과 같이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의 방식(전적 찬성=-2, 전적 반대=2)으로 점수를 부과하여 일관성을 유지했다.

이상의 10문항의 측정치를 모두 더한 것이 복지의식의 변수값으로 된다. 그런데 10개의 문항이 하나의 변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각 문항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문항 ③과 ⑥, ⑧, ⑩은 다른 문항과 상관관계가 적거나 역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하나의 변수로 포함시키기 곤란했다. 그래서 복지의식을 나타내는 지표는 10개 문항중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4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의 점수를 합한것으로 설정되었다²²⁾. 따라서 변수값은

22) 10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의 값은 .5947에서 6개의 문항으로 복지의식지표를 조정하였을 때 .6681로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다소 낮은 신뢰도이지만 척도를 구성하는 신뢰도로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12점에서 12점까지로 구성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반대경향이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앞에서 설정된 종속변수 '복지의식'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복지_{의식} = 문항① + 문항② + 문항④ + 문항⑤ + 문항⑦ + 문항⑨

3. 분석 방법

서론에서 제기되었던 연구문제는 다음의 네가지였다.

첫째, 1990년대 한국인의 복지_{의식}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가?
둘째,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세째, 복지_{의식}에 관련된 요인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가? 네째, 특수집단의 복지_{의식} 결정요인과 국민전체의 복지_{의식} 결정요인에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첫번째 연구문제인 90년대 한국인의 복지_{의식}의 경향성은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9가지 복지영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고, 각 영역의 총합인 복지_{의식} 점수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복지_{의식} 점수는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6개 항목에 대한 측정치로 계산되지만, 상관관계가 떨어지지만 복지_{의식}의 확인에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되는 4개의 항목에 대한 분석도 현황에 대한 확인의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두번째 연구문제는 앞절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해결가능한데, 이를 위해 분석방법으로 변량분석(두집단일 경우 T-test)을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것이다.

세번째 연구문제는 1980년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조사연구결과와 본 조사연구결과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시기는

1993년 11월으로서 1980년의 조사와는 14년의 시차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등의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해 왔고 이는 사회성원의 의식변화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의식변화들 중에 복지의식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80년의 조사결과와 1993년의 조사결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번째 연구문제는 기존의 조사연구들 중 본 연구와 비교가 가능한 몇편의 연구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본 연구를 비교함으로써 검토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 중 종속변수의 척도가 4점척도 이상인 1985년 김상균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와 1990년 김성한의 보사부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연구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기존의 복지의식 조사와 본 연구의 조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사용한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대체적인 경향을 기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작업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IV. 조사결과

1. 19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의 경향

본 조사연구에서 복지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9가지 영역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는 먼저 각 영역별 의식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러한 영역별 의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의식의 경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분야별 복지의식

① 의료에 대한 견해

‘몸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정부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견해에 찬성과 반대는 <표2>와 같이 나타났다. 찬성에 2점, 약간 찬성에 1점, 약간반대에 -1점, 반대에 -2점을 부과하였을 때 평균 0.774점으로서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경향이지만 그 정도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2> ‘정부부담의 의료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반대(-2)	약간반대(-1)	약간찬성(1)	전적찬성(2)	합계
빈 도	58	233	524	372	1187
%	4.9	19.6	44.1	31.3	100.0
평균점수	.774				

② 교육에 대한 견해

교육에 대해서는 의료보다 훨씬 찬성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똑똑하지만 부모가 가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진학시켜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 51.2%가 찬성이었고 전체평균은 1.304로서 의료분야의 평균 0.774점 보다 훨씬 높다.

<표 3> ‘정부부담의 교육혜택’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반대(-2)	약간반대(-1)	약간찬성(1)	전적찬성(2)	합계
빈 도	12	107	461	613	1193
%	1.0	8.9	38.5	51.2	100.0
평균점수	1.304				

③ 실업에 대한 견해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값이 0.057로서 교육과 의료부문에 대한 견해보다 찬성도가 훨씬 낮게 나타난다. 이는 근로에 대한 우리국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복지혜택에 인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금전지원'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반대(-2)	약간반대(-1)	약간찬성(1)	전적찬성(2)	합계
빈 도	199	344	459	175	1177
%	16.9	29.2	39.0	14.9	100.0
평균점수	1.304				

④ 조세에 대한 견해

조세에 대한 문항은 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못사는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라는 문항과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라는 문항이다. 첫문항과 두번째 문항의 차이는 두번째 문항에 본인이 재분배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첨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문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태도가 상반되게 나왔다는 점이다. <표5>와 <표6>을 살펴보면 첫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값이 1.043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 두번째 문항에 대해서는 -0.371로 반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분배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지만 본인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의사는 없다는 의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 조세에 대한 견해 I

구 분	명	%
전적반대(-2)	53	4.4
약간반대(-1)	156	13.0
약간찬성(1)	457	38.1
전적찬성(2)	522	43.6
합 계	1188	100.0
평균점수	1.043	

<표 6> 조세에 대한 견해 I

구 분	명	%
전적반대(-2)	233	19.4
약간반대(-1)	508	42.4
약간찬성(1)	358	29.9
전적찬성(2)	88	7.3
합 계	1187	100.0
평균점수	-.371	

⑤ 주택문제에 대한 견해(택지 국유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국유화시켜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그 평균점은 -0.219였다. 이는 세금부담의사보다는 반대정도가 덜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반대도가 심한 것이다.

<표 7> '택지의 국유화'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반대(-2)	약간반대(-1)	약간찬성(1)	전적찬성(2)	합계
빈 도	259	409	327	172	1167
%	21.6	34.1	27.3	14.4	100.0
평균점수	-0.219				

⑥ 평등에 관한 견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차이는 좁혀질수록 좋다'라는 견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경향은 <표8>과 같이 나타났고 그 평균치는 1.537로서 10개 문항 중 찬성도가 가장 높았다.

<표 8> '불평등 해소(평등)'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반대(-2)	약간반대(-1)	약간찬성(1)	전적찬성(2)	합계
빈 도	16	46	348	777	1187
%	1.3	3.8	29.0	64.9	100.0
평균점수	1.537				

⑦ 사회복지에 대한 왜곡된 편견의식의 정도

우리사회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인식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몇개의 견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해 보았다. '사회복지는 자선사업과 같은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들은 <표9>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적찬성에 -2점, 전적반대에 2점을 부과하여 4점척도로 했을때 평균점수는 -0.122로서 사회복지를 자선사업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표 9> '사회복지와 자선사업과 동일시'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찬성(-2)	약간찬성(-1)	약간반대(1)	전적반대(2)	합계
빈 도	168	466	379	141	1154
%	14.6	40.4	32.8	12.2	100.0
평균점수	-.122				

'우리동네에 장애인 보호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표10>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앞문항과 마찬가지로 전적찬성은 -2점, 전적반대는 2점을 부과하여 4점척도로 했을때 평균점수는 0.877이었다. 앞 문항의 결과와 달리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편견이 많이 완화되었거나 생각보다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치이다.

<표 10> '장애인문제'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찬성(-2)	약간찬성(-1)	약간반대(1)	전적반대(2)	합계
빈 도	59	210	462	452	1183
%	5.0	17.8	39.1	38.2	100.0
평균점수	.877				

'정부가 사회복지를 하면 할수록 국가경제는 더 나빠지고 국민들은 게을러진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반대의 경향이 우세했다. 전적찬성에 -2점, 전적반대에 2점을 부과하여 4점척도로 했을때 평균점수는 0.557로 나타났다.

<표 11> '사회복지와 국가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견해

구 분	전적찬성(-2)	약간찬성(-1)	약간반대(1)	전적반대(2)	합계
빈 도	75	311	461	327	1174
%	6.4	26.5	39.3	27.9	100.0
평균점수	.557				

2)복지의식의 경향

앞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각 영역별 의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역별 의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등에 관한 의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교육에 대한 의식이었으며, 주택문제와 조세Ⅱ에 대한 의식은 낮은 점수로 표시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영역별 의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의식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낼까? Ⅲ장 2절 변수의 설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복지의식은 앞에서 분석한 각 복지영역에 대한 10개 문항중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4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의 점수를 합한 것으로 설정된다. 그 항목들은 의료에 관한 항목, 교육에 대한 항목, 실업에 관한 항목, 조세(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위해 잘사는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주택문제에 대한 항목, 그리고 평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2, -1, 1, 2점의 4점척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복지의식'의 변량은 -12점에서 12점까지로 구성된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우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2점에 가까울수록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까우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점수를 위의 척도로 평가해 보면, 평균값은 4.496으로, 최빈치는 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를 근거로 하여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평가하면, 앞에서 설명한 복지의식의 두 유형 중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경향이 강한 것은 아니며, 부분적으로 영역에 따라 의식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의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 국가의 책임의 확대를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었으나, 실업자에 대한 태도나 본인의 복지부담의사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상당히 비복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

다. 따라서 복지의식의 평균값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적인 경향성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2> 복지의식 점수 분포표*

구 분	-12~-8	-7~-3	-2~2	3~7	8~12	합 계
빈 도	3	27	279	609	224	1143
%	0.3	2.4	24.4	53.3	19.6	100.0

* 이표는 복지의식점수 -12에서 +12까지를 다시 시각적 편의를 위해 5점단위로 묶어 표시한 것이다.

** 평균점수와 중앙값은 1점단위로 계산된 것임.

2. 복지의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여기서는 복지의식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설정된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토함으로써, 복지의식 결정요인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한번 독립변수들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정치적 이념,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주관적 계층, 소득수준, 직업, 학력, 성, 연령, 지역적 배경 등이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다. 첫 두변수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변수이며, 세번째에서 다섯번째 변수는 사회계층에 관한 변수이며, 나머지 변수들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이다. 통계기법은 두집단간 의식의 차이를 분석할 경우 t-test를 사용했고, 세집단 이상일 경우 변량분석(ANOVA)을 이용했다.

집단간 복지의식 차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변수

① 남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이 복지의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13>은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남성과 여성의 복지의식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3> 성별 복지의식의 t-test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값	1.04
남성	602	4.5781	3.400	t값	.86
여성	540	4.4037	3.468	자유도	1140

② 연령

연령별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표14>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복지의식이 연령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 연령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55.2095	13.8024	1.1716
집단내	1135	13371.7344	11.7813	
전체	1139	13426.9439		

* 연령구분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이상으로 5개 집단으로 분류함.

③ 도시와 농촌(지역적 배경)

도시출신과 농촌출신(구체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이하)간의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결과는 <표15>와 같다. 표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것으로 평가된다. 즉 지역적 배경의 차이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연령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3	9.7846	3.2615	.2761
집단내	1133	13386.2541	11.8149	
전체	1136			

④ 학력

학력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표는 <표16>과 같다. F값의 유의수준이 0.75로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학력이 다른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학력별 사회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6	40.2043	6.7007	.5689
집단내	1133	13344.5983	11.7781	
전 체	1139	13384.8026		

* 학력은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이상으로 분류하여 7개 집단으로 구분함.

2) 정치적 성향

① 좌파, 우파

<표17>은 정치적 성향이 좌파지향적인가 우파지향적인가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나누었을때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변량분석표이다. F값이 3.4773으로서 신뢰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17>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161.7272	40.4318	3.4773
집단내	935	10871.5707	11.6273	
전 체	939	11033.2979		

* 정치적 성향은 극좌, 중도좌, 중도, 중도우, 극우의 5개 집단으로 나뉘었으며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III장 2절 각주18)을 참조할 것.

** $p < .01$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더니 집단2(좌파)와 집단4(우파)간의 복지의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8>에 의하면 좌파와 우파간의 복지의식의 차이는 그 평균값이 5.1812와 4.0758로서 약 1점이상 좌파의 복지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이 좌파지향적인 집단이 우파지향적인 집단에 비해 평등지향적이고,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복지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8> Scheffe Test결과

집 단	빈 도	평균값	집 단	1	2	3	4	5
극좌(1)	40	5.2250						
좌파(2)	138	5.1812	집단1					
중도(3)	347	4.2651	집단2	-----			*	
우파(4)	177	4.0758	집단3					
극우(5)	138	4.7609	집단4					
합 계	940	4.4574	집단5					

②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

<표19>는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5개 집단으로 나누었을때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변량분석표이다. F값의 유의도가 0.0202로서 신뢰도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Scheffe Test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군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19>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136.5841	34.1360	2.9225*
집단내	1133	13217.9159	11.6840	
전 체	1137	13374.5000		

* $p < .05$

**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III장 2절 각주19)를 참조할 것.

변량분석결과에 따른 복지의식의 대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면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중간인 집단의 복지의식이 4.08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지지도가 높거나 낮을수록 복지의식의 평균치들이 높아져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중 복지의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그 평균값이 5.3846인 민주화를 적극 찬성하는 집단이었다.

<표 20>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별 복지의식의 평균값

구분*	집단1	집단2	집단3	집단4	집단5
평균값	5.3846	4.8293	4.0800	4.3211	4.9243

* 집단1에서 집단5의 순서는 민주화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데서 낮은 순서임

3) 계층

① 주관적 계층

계층이 다른 집단간 복지의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결과는 <표21>과 같다. F값은 3.4593이고 유의수준은 0.0159로서, 유의도 $p < .05$ 에서 종속변수의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계층이 다른 집단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1> 계층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 단 간	3	120.8455	40.2818	3.4593*
집 단 내	1131	13170.0302	11.6446	
전 체	1134	13290.8758		

* $p < .05$

** 주관적 계층은 상류계층, 중상류계층, 중하류계층, 하류계층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III장 2절 각주20)을 참조할 것.

구체적으로 어느 계층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22>에서 볼 수 있듯이 중상류계층과 하류계층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류계층의 복지의식은 중상류계층에 비해 평등지향적이고,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강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좌파에 가깝고,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중상류계층 복지의식지표 4.1641, 하류계층 5.3895).

<표 22> Scheffe Test결과

집 단	빈 도	평균값	집 단	1	2	3	4	5
상류계층(1)	3	3.6667	집단1					
중상계층(2)	390	4.1641	집단2					
중하계층(3)	647	4.5270	집단3					
하류계층(4)	95	5.3895	집단4	*			
합계	1135	4.4722						

② 소득수준

<표23>은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의식의 변량분석표이다. 50만원 미만의 하위집단의 복지의식 평균점수는 5.1842로서 200만원 이상의 상위집단의 점수 4.04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F값이 1.9554로서 신뢰수준 $p < .05$ 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소득수준별 복지의식

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23> 소득수준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4	90.9093	22.7273	1.9554
집단내	1072	12459.7834	11.6229	
전체	1076	12550.6927		

* 소득은 50만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원, 150-199만원, 그리고 2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됨.

③ 직업

직업에 따른 복지의식의 평균값과 변량분석표는 <표24>이다. 전문관리직의 복지의식의 평균값이 3.9157로서 가장 낮고, 생산직의 점수는 5.481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F값의 유의수준이 0.0690으로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4> 직업별 복지의식의 변량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SS)	평균자승화	F
집단간	7	154.3327	22.0475	1.8825
집단내	1119	13105.3905	11.7117	
전체	1126	13259.7232		

* 직업구분은 8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III장 2절을 참조할 것.

3. 본 조사결과와 기존연구와의 비교

복지의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 본 연구와 비교대상으로 설정된 연구들은 1980년 김영모의 연구, 1985년 김상균의 연구, 1990년 김성한의 연구이다. 김영모의 연구는 조사대상이 전국민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과 동일하였고, 조사 시기가 본 연구보다 10여년이 앞선다는 측면에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사회변동과 사회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양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되었고, 김상균과 김성한의 연구는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부서의 공무원과 예비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이들과 일반국민의 복지의식을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는 함의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세 연구들은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의 척도가 사분분류변수 이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 비교하기에 용이한 측면도 있었다. 물론 세 연구와 본 연구 공히 독립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종속변수인 복지의식의 척도와 구성내용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교의 한계로 남는다. 네 연구를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25>와 같이 제시된다.

<표 25> 기존 복지의식 조사연구와 본연구의 비교

연구자	조사대상 및 표본수	이념 및 의식모형	분석결과	이념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김영모 (1980)	전국의 가구주 (N=2,000)	자유방임형 보완적자유주의형 제도적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	보완적 자유주의형	계층, 성, 연령 학 력(통계적 검증절 차를 거치지 않음)
김상균 (1985)	서울시내 5개 4년제 대학 1학년, 4학년 (N=852)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중도우에 가까운 중도좌	학년, 전공, 성, 부의 생활수준 부의 교육수준
김성환 (1990)	보건사회부 관료 (전수조사, N=138)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	중도우에 가까운 중도좌	종교, 부의 교육수준
김상균 정원오 (1994)	20세 이상 전국민 (N=1,198)	의식모형 미설정 (극우와 극좌를 25점 척도로 구성)	의식점수 4.5로서 중도좌	정치적 성향, 주관적 계층

김영모의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복지의

식의 대상영역은 복지권, 빈곤, 실업, 교육, 주택, 노인의 7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7개의 복지지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개인, 가족, 친척(조상), 개인+정부, 직장, 지역사회, 정부(국가)라는 7점 척도를 구성하여 이들 점수의 합을 복지의식점수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복지의식점수의 변량은 7점에서 부터 49점까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4등분하여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 순으로 복지의식의 유형을 자유방임형, 보완적 자유주의형, 제도적 자유주의형, 사회주의형으로 규정하였다. 분석결과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은 보완적 자유주의 모형에 속한다고 결론지었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지역, 직업, 계층, 성, 연령, 학력으로 설정하였고, 그 중 계층, 성, 연령, 학력의 차이에 따라 복지의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제도적 자유주의형과 사회주의형 복지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자유방임형을, 연령이 낮을수록 제도적 자유주의형 성향이었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자유방임형, 높을수록 제도적 자유주의형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층별로는 상층일수록 제도적 자유주의형과 사회주의형 성향이 강했으며, 하층일수록 자유방임형과 보완적 자유주의형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조사결과는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한계들을 전제로 깔고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1980년 연구에서 독립변수별 집단간 의식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 변수인 성, 연령, 학력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계층별 의식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²³⁾ 그 내용이 80년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80년 연구에서 중상계층이 가장 높은 점수(국가개입형)를, 하위계층이 가장 낮은

23) 본 연구에서 사회계층을 나타내는 변수로 주관적 계층판단과 소득수준, 직업의 3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소득수준과 직업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계층별 의식의 차이란 주관적 계층만으로 한정한다.

점수(자유방입형)를 받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주는 데, 하위계층이 가장 높은 점수(5.3895)를, 중상계층이 이보다 낮은 점수(4.1641)를 나타냈다. 두 조사에서 사용한 변수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지만, 약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층간 의식의 변화의 폭과 그 방향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는 있다.

한편 1980년의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의식이 중하위점수에 해당하는 보완적 자유주의형으로 규정된 반면, 본 조사에서는 중상위점수를 나타냄으로써 1980년 조사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제도적 자유주의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국민전체의 복지의식 수준이 10여년간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변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과정에서 국민복지의식의 수준이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1985년의 대학생들 대상으로한 복지의식 조사와 본 조사를 비교해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1985년의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복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이념을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극좌의 4분법으로 나누고 극우는 1점, 중도우는 2점, 중도좌는 3점, 극좌는 4점의 가중치를 부과하여 복지의식을 측정하였다. 대학생들의 평균점수는 2.746으로서 중상위 점수대(중도우에 가까운 중도좌)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비슷한 복지의식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복지의식 점수는 -12점에서 12점까지 25점 척도이며, 이를 비교의 편이를 위해 -12--8, -7--3, -2-2, 3~7, 8~12의 5등급으로 분류가능하다. 본 조사결과 1994년의 국민복지의식 평균점수는 4.496으로서 중상위에 해당하였다. 즉 1985년의 대학생의 복지의식과 1994년의 국민전체의 복지의식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의 의식이 일반국민의 의식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94년의 복지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척도의 상이성을 고려한다면 위험스러운 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른 사회변화, 특히 80년대 후반의 급격한 사회변동(민주화 투쟁, 노

동자 대투쟁, 문민정부 수립 등)으로 인하여 복지의식이 어느 정도 변화(상승)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4연구에서 각기 상이하게 검증되고 있는데, 1980년의 연구는 통계적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1985년의 연구에서는 학년, 전공, 성, 부의 생활수준, 부의 교육수준과 같은 독립변수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1990년의 연구에서는 종교, 부의 교육수준이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 주관적 계층이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상관관계가 인정되는 변수는 부의 생활수준, 주관적 계층과 같은 사회계층변수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세 연구의 모집단이 다르고, 설정된 독립변수들의 내용이 상이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한 엄밀한 연구는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제일 것이다.

V. 결론

본 장에서는 전술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몇가지 새로운 발견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90년대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 국가책임, 이데올로기, 집합주의에 대한 경향 등을 양극단으로 나누어 -12점에서 12점까지 25점 척도로 했을 때, 평균 4.496으로서 중상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다. 사회복지의 영역별 의식을 4점 척도로 했을 때, 평등에 관한 의식이 1.537로서 가장 높은 점수였으며 교육(1.304), 조세 I (1.043), 의료(0.774), 실업(0.057), 주택문제(-0.219), 조세 II(-0.371)의 순이었다²⁴. 독립변수별 의식

24) 여기서 각 영역에 대한 복지의식점수는 그 영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각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문제의 영역은 주거문제에 대한 의식이라기 보다는 “택지의 국유화”에 대한 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은 평등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평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영역별, 집단별 상이한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⁵⁾. 이러한 경향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서구 국가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영국선거조사(British Election Survey)와 1981년 미드웨이조사(Medway Survey)를 자료로 한 테일러구비(P. Taylor-Gooby)의 연구에 의하면²⁶⁾,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63년부터 79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복지국가의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으며(93% 찬성), 평등과 재분배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역별로는 다양한 견해를 취하고 있었으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deserving groups)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지를, 자격이 없는 집단(undeserving groups)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 의료(NHS), 폐질·불구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었으며, 실업급여, 주택, 아동급여 등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영역별 태도는 우리나라의 경향과 거의 비슷하다. 평등과 같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높은 지지도를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영역별로는 교육, 의료 등에 높은 지지도, 실업, 주택 등에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비슷한 현상이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는 다르다. 서구사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는 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인한 발달된 복지제도를 경험하면서 형성되어졌지만,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의식은 복지제도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70년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²⁷⁾. 그러나 국민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5) 독립변수별 각 영역의 분할표분석은 본 조사자료를 사용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1994. pp.121-167.을 참조할 것. 본 연구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26) Peter Taylor-Gooby,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tate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1985, pp.26-35.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수준을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할 때 다양한 태도를 드러낸다²⁸⁾.

한국은 국민최저수준보장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실업, 주택 등의 영역에서는 특별한 복지서비스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복지제도발달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의식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의 과반수 이상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²⁹⁾,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조세 I 과 조세 II의 비교에서 드러나듯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잘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본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의사는 거의 없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이상과 같은 현상 - 서구와의 차이, 서구에 비해 일찍 복지에 대해 부정적 태도 발생 - 이 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와 같은 의문은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각 영역별 의식을 종합한 복지의식에서 의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변수들은 정치적 성향과 계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사회복지의식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었고 정치적 이념이 좌파인 집단은 우파에 비해 복지의식의 평균값이 약 1점 이상 높았다. 계층별로는 중상위계층과 하위계층간에 복지의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 하위

27) Peter Golding & Sue Middleton, *Images of Welfare*,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1982, p.164.

28) Brian Abel-Smith, "Whose Welfare State?", Charles I. Schottland.(ed.), *The Welfare State*, p.243.

29) '복지지출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67.5%가 세금과 이용료가 증가하더라도 복지와 사회보장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견해 표명. Peter Golding & Sue Middleton, *상세서*, 1982, pp.182-3.

계층이 중상위계층에 비해 약 1점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치를 준거로 하면, 정치적 이념이 좌파인 집단은 우파에 비해, 계층이 하류계층은 중상류계층에 비해서, 사회가치의 측면에서는 평등, 우애를 강조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국가책임을 확대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며, 집합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1980년의 국민복지의식과 비교하면, 계층별 복지의식의 경향성에 있어서 상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 연구에서 중상계층이 가장 높은 점수를, 하위계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1980년의 연구에서 하위계층의 복지의식이 중상위계층의 복지의식보다 낮은 현상을 복지의식의 歸屬性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의식의 歸屬性이란 福祉權·社會權의 주체적 인식결여에서 비롯하고 이것은 시민권의 미발달이 원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³⁰⁾.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복지의식의 歸屬性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1980년의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복지의식이 중하위점수에 해당하는 보완적 자유주의형으로 규정된 반면, 본 조사에서는 중상위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제도적 모형 또는 평등지향쪽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국민전체의 복지의식이 지난 10여년간의 정치적 민주화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했으며, 80년대 초반의 빈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80년대 후반의 민주화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 등의 과정을 통해 70년대에 미발달했던 시민권이 복지권, 사회권으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30) 김영모, 상계서, 1980, p.54.